

● **누리사업 3차년도 중간평가 결과 발표**

교육인적자원부와 한국학술진흥재단은 9월 7일(금)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2004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누리(NURI)사업 3차년도 중간(연차)평가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중간평가는 전체 13개 누리사업단 중 '04, '06년도에 선정된 130개 사업단에 대하여 금년 3월 계획공고를 시작으로 현장점검(5, 6월), 요건심사(6월), 본 평가(7월)를 실시하고 누리분과위원회관리위원회 개최(8월)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진행되었다.

이번 평가는 지난 3년 간의 사업단 운영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의 환류를 통해 사업의 질적 개선을 도모하고, 대학의 혁신, 구조조정 등 새로운 목표 설정을 위한 4, 5차년도의 계획수립을 유도하기 위하여 실시되었는데, 교원확보율, 학생취업률 등 교육여건 개선실적, 특성화 노력,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실적, 지역발전에의 기여도 등에 대한 당초 목표 달성 여부, 3년 간의 성과,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을 중점적으로 평가하였으며, 특히 지역사회와의 교류협력실적 등 지역사회의 참여와 관심을 제고하기 위하여 처음으로 지역발전 기여도 평가항목을 추가하였으며, 향후에도 그 비중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주요 내용**

◇ **누리사업 주요 성과분석**

- 특성화분야 교육여건 개선 및 사업성과 가시화
  - 사업단 교원확보율(21.2%) 상승 : 63.8%('04) → 85.0%('07)
  - 사업단 학생총원을 100% 달성 : 96.3%('04) → 100.0%('07)
  - 사업단 학생취업률(12.4%) 상승 :

58.9%('04) → 71.3%('07)

- 취업능력 향상효과 증가
  - 학생자격증 취득(12,216건 증가) : 12,617건('05) → 17,557건('06) → 24,833건('07)
  - 토익성적 600점 이상(7.92% 증가) : 21.21%('05) → 22.61%('06) → 29.13%('07)
- 지방대학 구조조정 촉진 : 3년 동안 정원감축 12,073명

◇ **평가 결과**

- 우수사업단 인센티브 지원 : 24개 사업단, 33억원
  - 상위 10% 사업단(대형 3, 중형 3, 소형 6) : 국고지원금의 10%
  - 차상위 10% 사업단(대형 3, 중형 3, 소형 6) : 국고지원금의 5%
- 사업단 선정 취소 : 3개 사업단, 1개 사업팀, 36억원
  - 요건미충족 사업단 : 1개(원광대)
  - 요건미충족 사업팀(협력대학) : 1개(충북대)
  - 평가 결과 만점의 60% 미만 사업단 : 2개(광주교대, 경주대)
- 사업비 삭감 : 63개 사업단, 56억원
  - 하위사업단 사업비 삭감 : 20억원(12개 사업단)
  - 평가단에 의한 사업비 조정 : 22억원(28개 사업단) 등

● **2009학년도 입학예고제 시행**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가 전국입학관리자협의회 및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한 기본계획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내년 수능시험은 11월 13일에 실시되고 수능성적은 12월 10일에 통지된다. 수시 1학기 모집은 2008년 7월 14일부터 8월 31일까지, 수시 2학기 모집은 2008년 9월 8일부터 12월 14일까지 실시된다. 정시모집은 2008년 12월 18일부터 2009년 2월 15일 사이에 모집군별로 실시되며, 추가모집은 2월 17일과 23일 사이에 이뤄진다.

전문대학의 경우 수시모집까지의 전형일정은 4년제 대학과 동일하다. 단 정시모집에 있어 군별 구분이 없으며, 같은 기간 내에 각 대학의 장이 원서접수와 합격자 발표·등록 등을 자율적으로 정해 실시할 수 있다.

또 3월 초까지였던 추가모집 전형일정은 2월 말까지 앞당겨졌다. 이에 따라 모든 대학이 3월 1일부터 신학기를 시작할 수 있게 됐다.

● **학습사회실현을 위한 미래교육 비전과 전략(안) 발표**

대통령자문교육혁신위원회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미래교육 비전과 전략(안)'을 발표했다.

교육혁신위원회는 향후 공청회와 전문가 토론회 및 학부모, 교원 학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9월 중 최종안을 확정된 뒤 교육인적자원부에 정책으로 채택할 것을 제안할 계획이다.

▲ **교사자격갱신제, 교원전문대학원 도입**

교원들을 대상으로는 오는 2015년부터 이미 학교체제 내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사들이 자신의 교사자격증을 주기적인 간격으로 갱신하는 교사자격갱신제와 교감·교장평가제도, 우수교원에 대한 학습년제가 도입된다.

뿐만 아니라 교원양성의 주된 경로가 사범대, 교대, 일반대 교직과정, 교육대학원 등에서 장기적으로 교원전문대학원체제로 전환되는 등 교원

양성과정이 크게 달라질 예정이다. 또 학교의 기능 다양화에 대응하고 학생을 위한 전문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 사서, 상담사, 복지사 등 다양한 전문 인력이 확대될 전망이다.

▲ **대학의 자율역량 제고를 위한 시스템 혁신**

대학분야에서는 대폭적인 규제완화를 통해 자율·경쟁시스템으로 전환하고 대학운영상의 모든 권한을 개별 대학에 이양·위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OECD 국가 평균수준 이상의 재정을 확보하여 교육연구역량 제고를 위한 인프라 구축을 지원할 방침이다.

'미래교육 비전과 전략(안)'은 미래예측에 근거하여 5년, 10년 앞 뿐만 아니라 한 세대 앞까지 내다보는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교육개혁방안으로서 참여정부가 이미 발표한 바 있는 '함께 가는 희망한국 VISION 2030', '사회비전 2030 선진 복지를 위한 새로운 비전과 전략' 등 국가미래비전과의 일관성과 연계성을 유지하였다.

뿐만 아니라 '미래교육 비전과 전략(안)'은 저출산·고령화, 사회양극화, 세계화 심화 등 국내 외상황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여 멀리 보고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심각한 위기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새로운 미래교육의 비전으로서 수립된 것이다.

'미래교육 비전과 전략(안)'은 지금까지의 주된 정책기조인 수요자 중심의 교육, 교육기관의 자율성과 책무성 제고, 교육의 다원성 추구 등은 지속하되 과거에는 심각한 사회현상으로 인식되지 않았던 사회양극화 및 저출산·고령화의 심화와 보다 심화되어 가고 있는 사회문화적 세계화 등에 대한 대책으로 ▶ 교육을 통한 사회통합과 균형발전 ▶ 유아 무상교육 실시, 고령자 및 여성의 평생직업능력 개발 ▶ 다문화이해교육 강화, 개도국에 대한 교육지원 확대 등을 제안하고 있다.

● 대학정보, 홈페이지에서 의무공개 시작

올해 11월부터 경북대, 한국교원대, 한국산업대, 인하공업대학 등 10개 대학이 학교규칙을 비롯 학점평가기준, 취업률, 교원현황 등 13개 영역에 대한 정보를 학교 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학정보공시제 시범학교 10곳을 발표하고 2008년 5월부터는 전 대학에 확대·운영할 방침이다.

정보공시제란 대학의 장이 교육·연구에 대한 주요 정보를 매년 1회 이상 공시하고, 공시 정보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교육부는 대학의 장이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허위로 공개하면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해야 하고, 명령위반기관에는 행·재정상 제재를 가할 수 있다.

교육인적자원부와 한국교육개발원(전담기관)은 대학정보공시제 시범운영에 참여를 희망하는 대학의 시범운영계획서를 심사하여, 대학의 역량, 유형, 소재지, 규모 등을 고려하여 10개 대학을 선정하였다.

시범운영대학은 경북대, 서울교대 외에 한국교원대, 건국대, 건양대, 서울산업대, 남도대, 영진전문대, 인하공업대, 순천청암대 등이다.

시범운영을 거쳐 2008년 5월부터 대학정보공시제가 전면 시행되면 대학의 교육·연구역량, 성과 등 주요정보가 공개되어 국민의 알권리가 충족되고, 수요자의 학교선택권이 보장됨으로써 대학 간 경쟁이 촉진되고 시장기제에 의해 대학의 구조개혁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교육부, 대학자율화 추진계획 33개 항목 발표

교육인적자원부는 33개 과제에 대한 '대학

자율화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자율화계획은 대학과 전문대학,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대학법인협의회 등으로부터 자율화 수요를 조사한 뒤 21명의 민·관 합동 대학자율화위원회를 구성, 7번의 회의를 거쳐 마련된 것으로 과제별로 2008~2011년 시행에 들어간다.

추진계획에 따르면 우선 사립대학 및 사학법인 운영의 자율성이 확대된다. 사립대학이 확보한 교지가 분리돼 있어도 인접교지는 단일교지로 인정하는 방안을 마련해 교지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을 지원한다. 건물이나 기자의 감가상각에 대비해 별도의 적립금을 보유할 수 있도록 감가상각충당적립금제도를 도입, 적극적인 시설개선을 유도한다.

또 학교법인이 차입금을 얻을 때, 일정 규모 이상의 장기차입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선 관할청의 허가 또는 신고 없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학교법인 임원이 연임할 경우 기존의 승인제에서 보고제로 전환해 업무절차를 간소화한다.

대학의 수익창출을 위한 자율성도 늘어난다. 학교기업 금지업종을 현재 102개에서 21개로 축소한다. 현재 음식소매업 등 52개 소매업은 금지업종에서 제외됐고 백화점이나 영화관, 스키장 등 29개 업종은 제외 여부가 논의되고 있다. 또한 학교기업을 학교 바깥에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해 기업과의 산학협력을 보다 강화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든다.

이밖에 산학협력단이 국고보조사업 대응자금을 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산학협력 대응자금을 교비회계에서 산학협력단회계로 전출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학사운영 등에도 유연성이 최대한 보장된다. 수업 일부를 외국 대학에서 이수한 경우에도 공동명의 학위수여가 가능하도록 허용한다. 전문대학 전공심화과정 등록요건인 산업체 경력

으로, 재학 중에 산업체에 근무한 경력도 인정해 '일과 학습의 병행'을 유도한다.

또 국립대의 광역(학부) 중심 모집단위를 필요한 경우 부분적으로 학과단위로 바꿔 모집하는 것이 가능해지고, 우수대학 사범계열은 학과 간 정원을 자율 조정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 고등교육기관의 교명에 국립이나 도립, 사립 등 설립주체를 표기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현장에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할 사항을 대폭 축소한다.

이번 대학자율화 추진계획은 ▲원칙적으로 자율화하되 책무성 확보와 연계하고 ▲사전규제적 업무에서 자율화하고 사후에 평가를 강화하는 쪽으로 전환하며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나 사회통합 등을 위해 필요한 규제는 최소한으로 유지한다는 기본방향에 따라 마련됐다.

정책을 전략적으로 추진한다면, 인적자원이 적재(適材)·적기(適期)·적소(適所)에 공급되어 양성과 활용의 선순환구조가 확립되고, 능력 중심의 학습사회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 ● 국가 인적자원위원회 출범

국가인적자원위원회는 개정 인적자원개발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07.6)에 따라 구성되었다. 이 위원회는 인력수급 분야의 민간전문가 참여, 여성·군인·준고령자 등 정책외연 확대, 교육정책·연구개발정책·복지정책·산업정책 등 관련 정책과의 연계강화차원에서 기존의 인적자원개발회의와는 커다란 차별성이 있으며, 한 번의 학교교육만으로 평생을 살아가고, 직업이나 산업부문별 개별부처가 제각각 인력을 양성하던 종래의 방식에서 벗어나 생애고른 학습기회 제공, 국가차원의 통합적인 인적자원양성·활용체제를 통해 국민 모두가 맡은 분야에서 최고가 될 수 있는 새로운 인적자원 패러다임을 만들어 갈 것이다.

1본부 3관 8팀 67명 규모의 인적자원정책본부를 두어 국가인적자원위원회의 사무지원 및 인적자원개발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국가인적자원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인적자원